

“교육생태계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공진화가 가능한 교육경쟁체제”

한승희*

I. 들어가며

겉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교육은 꽤 괜찮아 보인다. 아직까지 지구상에 8억에 가까운 인구가 비문해자로 남아 있고 그들 중 반 이상이 아시아에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교육은 꽤 성공한 편이다. 2008년 유네스코가 발간한 EFA글로벌모니터링리포트(EFA Global Monitoring Report)는 교육발전지수(EDI)에 따라 ‘낮은 EDI국가’, ‘중간 EDI국가’, ‘높은 EDI국가’로 나누었는데, 이 가운데 아시아에서 ‘높은 EDI국가’에 속한 나라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몇 안 되는 국가들 뿐 이다(UNESCO, 2007). OECD가 수행하고 있는 국제학력비교평가(PISA)에 의해 드러나는 학력의 국제경쟁력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고등교육까지 통틀어 우리나라 취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요컨대, 객관적 지표로 나타나는 한국의 교육체제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그리 나쁘지 않다.

그러나 안을 드러다 보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현재의 상황은 결코 ‘지속 가능한 교육발전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다. 잘 알려진 대로, OECD의 PISA 조사는 한국학생들이 공부를 억지로 하고 있으며 이미 지쳐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기계적인 학습에 익숙한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자연스럽게 또 다른 입시에 몰입한다. 각종 국가고시, 자격증, 취업준비에 별 거부반응 없이 적응한다. 그리고는 취업 후 학습으로부터 조기 퇴역한다. 한국교육체제의 중심에 서 있는 대학은 자기 진화의 DNA를 잃어버렸다. 국가는 총체적으로 교육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지금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청소년 세대의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욕을 집요하게 거세해가고 있다. 학습의 생명성을 거세한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 교육체제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에 비유한다면, 그 생태계는 생명성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상실로 인하여 자정력과 자기성장력을 잃어버리고 공멸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썩은 물이 생명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부터 교육생태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교육의 숲은 개발의 조급성에 밀려 오염되었고, 초식동물은 육식을 하도록 강요되고 있다. 습지와 뺨은 개발논리에 밀려 하나 둘 썩 사라지고 있다. 그로 인하여 생태 전체가 거꾸로 서 있다.

II. 발상의 전환: 교육생태계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1. 생태적 사고와 교육

지구상의 생태계는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안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종들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생태계란 그 생명들의 조화로운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보장해 주는 복잡계라고 할 수 있다. 구조는 복잡하지만 그 목적은 매우 분명하다. 지구상에 생명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생태계는 생명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생태계가 무너지면 생명도 끝이다.

인간 사회의 많은 영역들이 자연의 생태계를 닮았다. 일찍이 무어는 수많은 기업들로 이루어진 경제계를 기업생태계라고 지칭하였다(제임스 무어, 1998). 정보와 지식의 바다인 인터넷은 이미 정보생태계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인간사회의 복잡성은 사회생태계라는 연구들을 통해 그 베일을 벗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유기적 복잡계적 성격을 갖는 인간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들로서 생태계의 구조와 과정을 모델로 삼은 것들이다(Bronfenbrenner, 1979; Crumley, 1994; Davenport, 1997). 교육생태계라는 개념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제안되었다. 그 아이디어를 잠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실천과 제도, 기관, 그리고 교육과정은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진화를 해 왔다.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해 왔으며, 그 숫자에 있어서도 이미 엄청나게 늘어나 있다. 그 가운데에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지배하는 종이 있다면 그건 단연코 학교일 것이다. 현생 인류가 탄생한지 얼마 안되어 지구의 거의 모든 자원과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도 지금까지 진화한 교육의 종(種) 가운데

데 가장 뛰어난 적응력과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학교가 교육생태계의 유일한 종은 아니며, 그 안에는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교육작용과 행위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힌 먹이사슬과 자원 순환체계, 그리고 서로 물고 물리는 공생과 기생관계로 가득 찬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 복잡하게 얽힌 교육복잡시스템 안에 인간이 없혀 있다. 오히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은 교육생태계의 일부분이며, 서로 피와 호흡 그리고 에너지를 공유하는 공생 관계에 있다. 그 시스템 안에서 교육은 인간의 생명과 삶의 한 부분이며, 거꾸로 인간은 교육생태의 성장과 진화 과정의 한 부분이다. (한승희, 2001).

생태의 성장과 자신의 성장을 분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생태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인식들은 바로 이런 것이다. 즉 사회체제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시스템은 인간성장시스템과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인간의 정신적 문명사적 발달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볼 때, 교육시스템의 붕괴는 그대로 인간성장체제의 붕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2. 교육은 숲이다: 교육생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학습의 생명성 진화

생태적 문제는 기계적으로 복잡한 것(complicated)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복잡(complex)하다. 교육생태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교육 문제는 단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교육의 종(種)에 대해 조처를 가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교육생태가 어떻게 움직이고 생성, 발달, 쇠퇴를 거듭하면서 전체적인 생태균형(ecological equilibrium)을 이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일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또한, 문제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렵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육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생태적 차원의 발전(development)이란 양적 성장과 함께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분화 및 재구성이라는 복잡계적 과정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마치 하나의 세포가 지속적으로 분화하면서 성숙한 유기체로 성장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러한 과정은 한꺼번에 실험실 안에서 만들어질 수 없으며 시간과 인내 그리고 그 동안의 균형감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교육생태가 무너지면 즉시 다른 체제로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며 다시 단순계에서 복잡계로의 진화를 기다려야 한다. 교육시스템이란 그런 것이다. 그 안에서의 균형(equilibrium)이 무너지면 다시 균형을 찾는데 상당

한 충격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생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화두는 우리에게 심각한 과제로 다가온다(Taylor, 2001; 윤영수 & 채승병, 2005).

우리의 문명사적 삶이 교육의 생태 위에 얹혀 있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교육 시스템 안에서 숨쉬고 생각하고 생존한다는 것이다. 그 자체가 인간의 문명사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호흡하는 마음의 성장판이다. 우리는 그 공기를 마시고 그 그늘에서 생각하며 그 흙 위에서 쉰다. 그래서 발제자가 보기에 교육계는 인간에게 있어서 일종의 숲과 같다. 한편에서 우리는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얻고 밝은 미래를 보장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교육의 혜택을 간접적으로 누린다. 초중등학교에서의 교과를 왜 배워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 나도 모르는 새에 정신적인 성장과 비판적 사고력, 날카로운 분석력, 무한한 창조력을 가지게 된다. 마치 그냥 숲 안을 걸었더니 몸이 건강해졌다는 이야기와 비슷하다. 도구적 합리성만이 교육의 가치를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육은 숲이다. 숲은 삶의 도구가 아니라 터전 그 자체이다. 목재와 뿔감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는 숲의 생명순환능력이며 지구생태의 최종 지킴이라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숲은 생명 그 자체이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학력과 직업능력을 획득하는 것 이상이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삶 자체이며, 인간 경험의 성장을 위한 가장 원초적인 지적 생명활동이다. 우리가 교양 교육을 그렇게도 중시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인간교육의 숲과 같은 기반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교육은 지식과 정보의 생명순환장치이며 인간의 정신사적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해 주는 버팀목 같은 것이다. 숲이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함께 동반해야 할 동반자 같은 것이듯이, 교육 역시 인간사회가 존재하는 동안 항상 함께 해야 할 동반자 같은 것이다. 교육은 숲이다.

3. 교육생태의 교란과 파괴

교육의 숲은 항상 개발의 필요 앞에 알몸으로 놓인다. 다양한 사회적 기능과 목적은 교육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교육의 종들이 가지는 기능과 구조들과 접합되어 있음으로써 그들을 관리하려고 한다. 수백 수천 가지의 이유들이 교육의 숲을 개발하고 이용하려고 등장한다. 교육은 정권재창출의 도구일 뿐더러 가난과 압박을 퇴치하는 핵심적인 도구로도 표상화된다. 교육은 사회민주화의 핵심 도구로 표현될 뿐더러 신자유주의 글로벌 자본주의

를 정당화하는 도구로도 묘사된다. 교육은 근대경제발전의 도구였을 뿐더러 21세기 친환경경제의 핵심도구이기도 하다. 교육은 사회를 평등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동시에 사회불평등화의 주범으로 낙인찍힌다. 교육생태라고 불리는 숲은 역사상 한번도 그대로 방치된 적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이 수행하는 부수적 기능이 아니다. 교육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생태계의 가장 핵심적인 소명은 학습의 생명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연 생태계의 최대의 목적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부수적인 혜택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교육생태계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은 교육의 핵심적인 목적, 즉 학습의 생명성을 성장시키고 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시스템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학습이 항상 생생하고 신선하고 활기차게 작동함과 동시에 그 학습역량이 지속적으로 발달 진화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범위가 현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만일 교육제도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민주화가 진전되었다고 하더라도 학습이 회피되는 사회가 된다면, 그래서 학습동기와 학습력, 학습기회와 환경 등이 퇴화해간다면 그 시스템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 교육생태 전반의 본질적 기능 보전을 걱정할 때이다. 지금은 몇몇 교육제도의 오작동 차원에서 문제를 기만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지엽적인 오작동의 문제 수준을 넘어 교육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스트레스와 생태적 위기가 공교육시스템의 존재적 위기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다가는 공교육시스템 전체가 급격히 쇠퇴하고 국가교육의 성장 에너지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학습을 끄찍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교육의 희망을 찾을 수는 없다.

교육생태를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다양한 교육기관들 가운데 하필이면 중등교육에 집중된 내부 압력은 폭발 직전이다. 다른 부문으로 그 압력을 분산할 노력은 어디에서고 보이지 않는다. 공부라면 억지로 하는 것이라는 학습스트레스가 교육생태의 생명성과 성장력을 급속도로 약화시킴으로써 학습조로현상이 사회 전반에 일반화된다. 급격히 강화된 학부모들의 학습투자현상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이 그에 기생하는 사교육이 굳건한 자기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아무래도 입시위주의 교육이 만들어 내는 엄청난 압력 및 그에 편승한 각종 기현상 들이다. 이들은 종합적으로 공멸적 경쟁체제를 토착화함

으로써 생태 전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III. 자기파괴적 경쟁체제로부터 교육생태계 살리기 8대 프로젝트

교육생태 전체를 자기파괴적 교육경쟁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끌 수 있는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질문들이 있다. 첫째, 교육의 과업과 목적에 대한 초심을 지켜야 하며 그것을 타협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생명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 것처럼 학습의 생명성을 희생하는 어떠한 교육정책도 거부해야 한다. 둘째, 자기파괴적 경쟁논리를 자기생성적 경쟁논리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일이며, 교육경쟁은 자신과의 싸움인 동안만 의미를 가진다. 셋째, 생태확장적 경쟁이 필요하다.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의 경쟁을 넘어 그 생태적 한계를 확장하는 것을 통해 경쟁의 핵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등교육의 제한된 공간 안에서의 경쟁을 탈피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서의 진정한 전문성 경쟁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의 종간의 경계와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 가운데에도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생태가 다르듯, 교육에서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의 생태적 원리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교육영역에 동일한 경쟁 논리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1. 교육적 경쟁개념: 학교에서 ‘교육’과 ‘선발’의 논리를 분리하여 사고하라.

근대교육시스템으로서의 학교는 ‘교육’과 ‘선발’의 두 가지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부여 받으며 탄생했다. 교육의 논리와 선발의 논리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가 학교라는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하면서 서로 교차 공존하게 되었고, 선발논리는 줄지에 교육의 논리와 뒤 엉키게 되었다. 요컨대 사회선발기능과 교육기능은 학교가 가지게 된 두 가지 다른, 그러나 서로 엉킨 기능으로서 학교에 대해 매우 기묘한 양상을 선사하게 되었다.

교육경쟁은 이 과정에서 탄생한 이중교배의 소산이다. (선발 기능이 없는 순수한 교육장면에서 경쟁논리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교육은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일이며, 학습자들간의 경쟁은 기껏해야 교육을 촉진하는 방법 정도로 사용될 뿐이다. 적어도 학습결과에 대한 비교우위적 평가란 애초부터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 변화된 내면끼리 서로 비교하여 우위를 따질 소위 객관적인 방법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쟁 혹은 경쟁력이란 학습자 상호 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의 경쟁력은 (1) 학습결과가 사회적 효용성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2) 이 과정을 통하여 더욱 학습을 사랑하고 욕구하게 되는 학습의 지속가능성 증대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은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과정에서 경쟁할수록 학습동기와 욕구가 더욱 불타올 수 있는 경쟁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자기생성적 교육경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반대로 경쟁을 하면 할수록 학습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상처의 아픔을 간직하게 될 뿐더러 패배자를 학습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 경쟁을 ‘자기파괴적 교육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파괴적 교육경쟁은 교육의 생태를 점점 축소시킬 뿐더러 그 효과를 소수가 독점하도록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교육과 사회선발의 관계 속에서 탄생한 또 하나의 (잘못된) 신화는 학교의 평등화 기제 논란이다. 한편에서 학교는 (그 안에 선발기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이유로 인하여)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파워로 대접받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증명된 바가 없다). 다른 한편에서 학교는 바로 동일한 구조 안에서 사회불평등의 확대재생산자로서의 악명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이 점 역시 학교가 능동적으로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명료한 증거가 별로 없다).

사실, 교육불평등성은 사회불평등성에 정확히 비례한다. 비록 교육을 평등하게 기획함으로써 사회불평등의 정도를 축소하려고 시도한다고 해도 그 과정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지난 10년의 대한민국 교육정책과 현재의 MB교육정책의 흐름 속에서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학교가 사회불평등화를 일정기간 막아낼 수는 있겠지만 영속적인 장치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교육평등화를 통해 사회평등화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순진한 태도라고밖에 보기 어렵다.

이 논리에 수긍한다면 이제 교육경쟁을 사회평등화 기제와 맞물려서 생각함으로써

써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오류는 잠시 접어두도록 하자. 그럴 경우, 이제 교육경쟁을 통해 사회를 변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경쟁은 순전히 학교선발 과정에서의 비교우위를 접하기 위한 지위경쟁일 뿐, 교육의 본질적 과정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가치이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선발은 교육기관이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학교가 불평등해가는 사회를 막아서는 과수꾼이 될수록 교육은 더욱 왜곡된다.

사실 사회평등화 혹은 불평등화는 학교를 구체적으로 매개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전사회적으로 진행되는 성장 혹은 노화와 유사한 가장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며,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학교를 활용한다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이고도 비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려면 조세 정책이나 고용 정책을 통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 면에서 빠르고 정확할 것이기 때문이다. 발제자가 보기에 이런 장치들을 내버려 둔 채 학교를 통해 사회불평등을 해소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사기에 가깝다.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고등학교가 세계에서 가장 평준화된 채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회 자체가 가장 평등한 사회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자기파괴적 경쟁 제로섬 게임으로서의 경쟁과 상대평가

사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학습자 상호 비교를 통한 비교우위의 경쟁은 불필요하거나 혹은 적어도 논리적으로 교육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교육은 자신의 경험과 인식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이며, 함께 학습하는 동료 학습자와의 비교는 여러 모로 의미 없는 일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그건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소위 상대평가, 객관적 시험, 서열, 등수, 표준점수 등이 이런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이들은 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니다. 학습의 결과는 결코 걸으로 드러나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지는 등수 매기기 경쟁은 교육을 ‘자기파괴적 교육경쟁’으로 몰아 부친다.

자기파괴적 경쟁과 연결된 또 하나의 신화는 선발의 공정성 신화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교육은 인간 내면과 관점을 변화시키는 일이며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학업성취의 객관적 평가를 강조하면 할수록 교육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간단한 논리이다. 객관적 공정성이라는

신화 아래 수능처럼 표준화된 거대평가시장이 발달하면 할수록 교육기능은 왜곡되고 사교육시장은 그 시스템에 기생한다. 표준화된 시험일수록, 그 시험시장이 넓을수록, 그 시험의 중요성이 클수록 사교육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4지 선다 식의 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 정교화되고 과학화된 교육평가가 오히려 교육을 무력화시킨다. 이미 입시를 넘어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교사임용고사, 사법행정외무고시, 경찰고시, 공무원 시험 등은 이미 그 규모에 걸맞은(?) 사교육 시장을 키워 놓았다. 이 시험들이 대부분 학습의 물화(物化)와 무기력화 현상의 주범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교사임용고사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행되는 시험이 교육학이나 일반 교과교육학적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시중에 나돌고 있는 ‘임용고사 교육학 교재’는 교육학을 가장 말초적 반응으로 내몰고 있을 뿐더러 예비 교사들에게 그런 말초적 교육학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은 차라리 뇌를 학대하도록 몰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말하자면 학문과 전문 능력이란 그런 식의 공부를 통해 길러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식으로 평가될 수도, 평가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객관적 선발이란 일종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그 이데올로기가 교사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공연히 사교육 시장만 키워 놓고 있다. 사교육시장은 입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소위 ‘공정성’을 내걸고 이루어지는 모든 선발시장에 기생하고 있다.

선발은 물론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공정성의 이데올로기가 교육 생태를 스스로 파괴해가고 있다. 학교는 가르쳐야 할 학업성취의 절대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아이들을 이 기준 이상의 학업성취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의 전문성은 국가교육과정이 설정한 절대 기준에 의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성취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 나온다. 예컨대 학교의 역할은 한반 30명 아이들 모두를 성공적인 학습으로 이끄는 일이지 그들을 1등부터 30등까지 줄 세우는 일이 아니다. 모두가 100점을 맞더라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무슨 꼬투리를 잡더라도 차이를 만들어 줄을 세우는 일은 결코 교육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학교 역시 이런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줄 세우는 변별력을 개발하는 일은 그들을 선발하는 대학이나 기업이 고민할 문제이다.

표준점수라는 발명품은 우리교육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준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표준점수가 기대고 있는 정규분포는 그 자체로서 비교육적이다. 왜냐하면, 잘 가르친 학교의 학생성적은 모두 일정 기준 이상의 분포에 몰려있게 될 것

이며, 그 결과는 결코 정규분포를 그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변별력을 이유로 일부러 정규분포곡선에 맞추어 늘이고 벌려야 한다면, 표준점수야말로 우리 교육을 비추는 찌그러진 거울을 상징할 뿐이다.

늘 비교의 대상이 되는 유럽 국가들의 교육에서는 이런 평가의 왜곡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절대기준에 의한 엄격한 유급과 조기진급이 있을 뿐이다. 물론 이들 나라에서도 경쟁이 있고 과외학습도 있지만, 그것은 남보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얼른 공부를 끝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한 경쟁이며, 유급하지 않으려는 추가학습이다.

상대평가라는 잣대가 사라지면 사교육은 자기 증식의 근거를 잃어버린다. 사교육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사교육은 상대평가가 만들어 낸 그림자다. 사교육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단계, 즉 영유아 교육단계에서부터 성인직업교육까지의 모든 과정에 존재하고 있다. 사교육은 결코 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문화 및 교환 양식을 대표한다.

3. 9년 기초교육은 습지이며 숲이다. 선발 스트레스 제로(0) 프로젝트와 상대평가 몰아내기

대개의 국가에서 9년 교육과정은 의무교육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중학교까지의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누구나 그 과정에서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정이 숨어 있다. 9년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권리이다. 이 시기의 교육은 고등교육과 성인학습을 거쳐 노인학습에 이르는 평생학습의 기초가 되는 핵심역량을 형성하는 단계임과 동시에 인지적 측면보다는 인간의 가장 내면에 있는 인격과 감성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교육은 그야말로 숲과 같은 것이다. 숲은 경쟁하지 않는다. 흙과 공기, 그리고 햇빛에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한다. 9년 동안의 의무교육은 마치 풍성한 마음의 숲을 가꾸는 것과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어도 9년 동안의 교육기간은 가능하면 동일 모형에 의한 국민통합교육을 실시하며, 계열분리 등의 차별화를 억제한다. 선다형 평가를 자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평가는 꿈도 꾸지 않는다. 국제중학교 설립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인간의 능력은 다중 동심원과 같다. 즉, 인간 능력의 심연에는 핵심적인 인성적

특성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단기간의 계획된 훈련을 통해 개발되기 어려우며 비교적 장기간의 포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길러져야 하는 부분이다. 반면, 그 표피층으로 갈수록 작업수행성과 기술로 대표되는 수행 역량층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내용과 필요에 따라 비교적 단기간에 쉽게 계획 훈련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자로 갈수록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후자로 갈수록 그것이 쉽다.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민 10년 기초공통교과의 대부분은 전자를 위한 장기적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다. 그 결과는 평가되기 어려우며, 더군다나 상대평가에 의해 줄 세워질 만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학교에서 경쟁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지키는 한에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교양교육, 전문교육, 계속교육 가운데 적어도 교양교육에 대해서는 비교우위적 평가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둘째,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비교우위적 평가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비교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 정상화는 상대평가와 등수개념을 학교에서 추방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상대평가는 결코 교육적인 평가방식이 아니며 교육과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생태 교란자일 뿐이다. 교육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종(異種)개념이다. 상대평가는 순전히 학습자에 대한 통제와 선발의 필요에 의해 학교에 강요된 제도이며, 이 방식이 살아 있는 한 학교교육은 항상 그 내부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학습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며, 내면의 변화는 결코 객관적인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수준별 교육과정(모국어, 외국어, 수학, 과학)에 대한 학업성취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이 경우도 국가가 설정한 절대기준에 터한 절대평가 개념에 의존해야 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설정한 ‘수준’을 만족한 학생의 경우 등수와 상관없이 승급하여 오직 절대 기준의 만족도에 의하여 차상위 수준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그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는 집중적인 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적어도 9년 의무교육 기간 동안만큼은 학교 내에서의 ‘경쟁제로 프로젝트’가 완성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도 학교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서의 4지 선택형 지필시험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활용한 상대등급화는 결코 학교 안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4. 후기 중등교육의 핵심 기능과 학교계층화 경계

글로벌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열망은 한국 교육에서 ‘국제중’ ‘외국어고’ ‘국제대학원’ 등의 열풍을 불러왔지만, 그것은 사실 명품 교육을 선호하는 사회적 차별화 전략과 결합하면서 실질적인 글로벌화보다는 단순한 차별화 전력으로 머물고 말았다. 또한 ‘수월성’이라는 이름으로 치장되면서 다시 교육 평등성을 위협하게 되었다.

최근 학교다양화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면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등 이른바 학생에 대한 직접선발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후기중등교육체제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이들은 전체 고등학교의 약 20~30%에 육박할 전망이다. 한국의 후기중등교육이 명확하게 수월성에 의해 이분화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구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결코 보편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 즉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후기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학교계층화가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형태변환이 전체 교육생태에 어떠한 급격한 충격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시급히 요청된다.

차후 이러한 후기중등교육 계층화는 그대로 현재의 대학서열화와 연동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다시 글로벌 노동시장과 로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경로와 정확히 결합하게 될 것이다. 즉, 글로벌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전기중등교육을 마치는 순간 곧바로 정해져 버리고, 그 구분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거치는 동안 보다 견고해지는 양극화 형태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앞으로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글로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보편적인 통로가 공교육 전반을 통해 열려 있는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명문 사립학교들이 글로벌 노동시장 접근경로를 독점하고 기타 평범한 공립학교들은 국내 노동시장으로의 공급통로로 이원화되는 결과를 고착화하게 될 것이다.

이제 글로벌화에 대한 특별한 변화의 요구는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압력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정도 역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교육문제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이중 층위 정책 (two tier policies)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 되었다. 이중 노동시장(global & local)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되, 그것이 특정 계열화를 통한 이중통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결코 교육생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결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믿는다.

5. 대학의 공진화적 연합체제 구축

교육혁신이 필요하다면 중등교육이 아닌 대학에서부터 손을 대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80 퍼센트 이상이 대학을 간다. 4년제 대학만 따지고 보더라도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반수 정도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한다. 이제 대학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대중교육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의무교육과 달리 대학은 그 자체가 전문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화되고 분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관박이 대학교 모델’, 즉 어느 대학에 가도 똑 같은 구조와 학과, 학사구조와 교무구조 등을 가지고는 대학의 서열화 및 그로 인한 학벌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전통적 의미의 대학 개념으로부터 ‘대학’이라는 이름을 과감히 버리는 대학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KAIST는 엄밀하게 말하면 대학교(university)가 아니면서도 훌륭하게 고등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이제 공릉과 같은 몸집을 가진 대학은 생존할 수 없다. 대학의 구조를 바꾸면 입시와 중등교육혁신의 길이 보인다.

첫째, 상위 20% 대학들의 수준과 선호도가 비슷해 질 수 있다면 최상층 학생들 사이에 벌어졌던 불필요한 과다경쟁의 양상이 누그러질 수 있다. 지금처럼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주요사립대’들의 날 선 비교우위경쟁은 교육생태의 자기파괴적 양상만을 불러올 뿐이며 무어가 말했던 ‘경쟁의 종말’을 그대로 결과할 뿐이다. 이들간에 공진화(共進化) 모델에 기초한 상생적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IT산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IBM의 열린 아키텍처 모형 덕분이었으며, 그 맥락 안에서 IBM, Dell, HP 등이 공생적 생태계를 구성해 내었기 때문이었다. 서로가 경쟁에만 전념했다면 서로 소비적 과다경쟁으로 공멸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상위 20%의 대학들은 서로 공진화해 갈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전체 무리 가운데 하위 일부에 대한 도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수정된 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상위 20%의 대학들은 상위 20%의 우수한 학생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학생선발과 학사운영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입학정원 개념을 폐기하고 학과단위 입학으로부터 단과대학 단위 대규모 입학방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점수보다는 면접 등에 의해 잠재성을 개발하는 입시전형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학 스스로 질적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전형기준을 개발하고 그에 의한 70% 이내의 입학자 수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학 정원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 다소 과도하게 모집된 학생들은 1 2학년의 교양과정 동안 본격적인 적성 검토와 경쟁을 통해 전공을 결정한다. 대학 입학 후 원하는 전공에 진입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공격적인 진로 재탐색 및 필요시에 이들이 타 대학으로 편입하면서 자신이 획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학간 학생이동과 학점이동의 유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학구조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입시스트레스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학생태계의 전반적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우리나라 대학들은 외국의 경쟁력 있는 대학들에 비하여 규모 면에서 너무 작다. 특히 교수 수, 재정규모, 연구지원기반 등에서 결코 게임이 되지 않는다. 최근 서울대학교가 타임지 선정 50위 안에 드는 것은 그야 말로 교수 전체가 ‘미친 듯 뚚’ 결과일 뿐 그 자체가 지속가능성을 갖는 것일 수 없다. 현재보다 대학의 단위규모는 더 늘어나야 한다. 반면 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소수 몇 개의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독점하는 학벌주의가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현재의 대학 서열을 그대로 두고 선두 대학들의 규모가 늘어난다면 그야 말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멀티버시티(multiversity) 형태의 연합대학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 시도의 대표적 국립대학교들이 하나의 통합된 이사회를 구성한다. 둘째, 현재의 각 대학교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단과대학 및 학부/학과의 자율권이 지금보다 늘어나고 그에 따라 교무, 학사, 입시 등에서의 결정권이 높아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각 단과대학, 학부/학과간의 연대를 통한 각 국립대학교간 전공영역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예컨대 서울대 사범대학 경북대 사범대 충북대 사범대학 - 교원대 등간의 통합 구조), 그들간의 공동연구에 대한 WCU방식의 연구지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의 학생 공동 선발, 교류 확대, 및 공동학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결코 서울대학교 하나의 힘만으로는 하버드나 예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평생학습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장된 교육생태공간

평생에 걸쳐 한 사람의 인생은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태어나서 초기 교육(initial education)을 마칠 때까지이며, 두 번째는 입직 후 은퇴까지이다. 세 번째는 은퇴 후 새로운 노후 인생을 설계하고 최종적으로 죽음을 맞이 할 때까지

이다. 지금까지 교육은 첫 번째 단계의 교육 개념 밖에는 없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의 인생에도 교육이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교육설계는 지금까지 고등교육으로 집중되었던 학력의 쓸림 현상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을 사는 동안 인간의 직업은 최소한 평균 3, 4회 이상 바뀐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중점은 대학이 아니라 성인교육이다. 지금까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중등교육개혁에 매달렸지만, 지식 경제체제에서는 오히려 대학이 교육의 시작점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실제로 문제 해결의 열쇠는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구도의 현실화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문제를 정상화하려면 대학 이후의 교육구도를 혁신해야 한다.

최근의 추세는 직업역량(competencies)에 따른 학력과 자격의 호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학위를 형식/비형식/무형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격체제와 연동하도록 구축하는 이른바 국가자격체제(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의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유럽은 이미 유럽 전역에 대한 ‘유럽자격체제(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을 구축하고 실제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중등교육 이후의 다양한 교육(Post secondary education degree, diploma, certificate 혹은 qualification 등)을 통합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력과 자격체제의 관계에 있어서 학력이 자격의 조건으로 작동함으로써 결국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학력을 먼저 획득해야 하며, 이것은 결국 불필요하게 대학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산업기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 이상을 졸업해야 한다는 등).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자격획득 이후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post secondary education 시스템을 통하여 학력을 보완해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면 초기교육(initial education)으로서의 대학의 수요를 줄일 수 있을 뿐더러 현재 남아도는 대학 시설을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7. 학부모의 교육소비자 행태를 분석하라

학부모들이 교육참여 행동양식을 이해하는 것은 교육생태계 전반의 흐름과 구조

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부문이 되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가지는 이해 및 행동방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육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60년의 한국교육이 교육을 설계하고 제도화하는 국가 및 교사집단의 전유물이었던 시대는 지났다. 교육에서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때보다도 커졌으며, 그들이 어떤 패러다임과 심리적 요구에 의해 움직이는가라는 문제가 교육현상의 상당 부분을 결정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세대간 교육격차가 큰 나라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못 배운 구세대와 많이 배운 신세대의 격차를 배경으로 볼 때, 지금까지 구세대는 교육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신세대는 보다 격화되는 교육경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 가지가 부정적으로 결합하게 되었고, 신세대의 무한 학력연장 증후군에 대해 구세대는 무한 실탄 공급이라는 비합리적 연합현상이 일반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금의 경쟁 구도를 이끄는 부모세대는 급격한 대학 팽창을 몸으로 경험하며 성장한 세대이다. 지금 주로 30-40대 부모들은 1970-90년대에 초중등교육을 받았고 1980-90년대에 대학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1981년 이후의 1차 대학 팽창 및 1995년을 전후로 한 2차 대학 팽창의 사이에 끼어 있는 인구학적 특징을 가진다. 특히 30대 부모의 경우 대학팽창의 흐름과 같이 성장해 온 경험을 가지면서 동시에 사회운동의 경험을 가지지 못한 세대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공교육 체제를 경험하기 훨씬 이전부터 유아교육을 위해 '교육시장'에서의 소비를 먼저 맛보아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 시기 유아교육시장에서의 '생각 있는 소비자(educated consumer)'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만큼, 이들의 소비는 그대로 명품 우유의 연장선상에서 일상화되며, 그 습관은 아이가 공교육으로 진입한 이후에도 계속된다. 아이와 함께 학습하는 이른바 '부모와 아동의 동반성장 코드'가 이 시기에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아교육에서부터 교육을 '경영마인드, 장기 트렌드'로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그 부모와 아이는 유아비즈니스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

아이들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는 이 시기에 급증한다. 혹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작은 변화까지도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부모들을 엄습한다. 지난 5-6년 사이에 소아정신과 학습 클리닉이 부쩍 늘었고 ADHD 진단도 그 만큼 늘었다. 주변에 '애 잡는 엄마들의 이야기'가 나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에 대해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학원을 돌리는 데, 결국 애는 애대로 병이 나고, 부모는 화병이 나고, 벌써부터 공부가 괴물로 변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부모도 자신을

잃어버리고, 아이도 왜 공부하는지를 잃어버리는 공멸의 경쟁구도가 이 시기를 힘들게 만든다. 유아 시절 1-2년 먼저 학습하는 것이 과연 생애전반의 학습속도와 능력형성을 좌우할까? 검증된 신화는 하나도 없다. 유아대상 학습비즈니스의 희생양일 뿐이다.

8. 언론과 정치권의 편협한 교육 거래

교육문제는 매우 미묘할 뿐더러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마치 의학 전문기자가 필요하고 과학 담당 기자가 필요한 것만큼이나 훈련된 교육 전문기자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도 교육은 사회면 사건담당 기자가 경찰서와 학교를 함께 출입하며 취재한다. 교육은 사건일 뿐이다.

언론은 지금까지 교육을 이해하는 시각을 제공했고, 각종 정보제공을 통해 학부모들의 시선을 한쪽으로 고정시켜왔다. 각종 교육관련 토론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오락쇼보다도 못한 기획력과 정보력에 가슴을 쓸어 내릴 때가 많다. 쟁론의 주제를 감당하기에 담당 PD의 역량이 크게 모자라기도 하며,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도 시청자들을 설득해 낼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대원칙과 철학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져 갔다.

외국의 사례를 실어 나르기 바빴지만 심층취재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단지 1-2주 기획한 후 곧바로 현장으로 날아가는 해외취재를 통해 국내에 전송되는 건 편견과 표피적 정보들 뿐 이었다. 우리 교육과 생태적으로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사례가, 그것도 주로 신자유주의 사회정책과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영국, 미국, 호주 등이 보도의 중심에 서 있었다.

교육쟁점은 대중쟁론의 대상인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많은 경우 전문적인 심층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교육문제는 전염병이나 IT 그리고 경제활성화 대책처럼 복잡한 내부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정책과 문제의 해결은 거의 대부분 인기몰이식 비전문가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대 원칙과 상반되는 수많은 정책 파편들이 생태계를 교란하도록 내버려 둔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의 담당자들은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 사이에 교육문제는 정당간의 거래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정치권의 거래를

통해 교육정책은 그 생태적 복잡성이 아닌 개별 정책의 편린들로 환원되어 버렸다. 서로 피가 통할 수 있는 정책들의 복합체가 아닌 토막난 정책들의 집합이 되어 버렸다. 그 사이에 피가 통해서 새 살이 돋아나기보다 오히려 살이 썩고 냄새가 나는 현상이 여기저기에서 목격된다.

IV. 학습사회를 향하여

요컨대, 교육은 인간의 정신사와 문명사적 삶과 동행하는 핵심적인 사회장치이다. 그것은 마치 숲과 같아서 그 안을 걸으며 삶이 성장한다. 교육은 지금까지 사회적 쟁점이나 경제정책, 정치 이데올로기 등의 시각에 덧입혀졌으며, 그 파편적 시각의 모자이크로 이해되어왔다. 교육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태계로 이해하고 그 총체적인 건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시각으로 교육계를 바라본 적은 드물었다. 물론 교육은 사회의 다양한 기능과 목적 등과 연계되어 있는 활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이 과정에서 학습의 생명성이 퇴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제 교육시스템이 다른 사회적 쟁점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기를 그치고, 교육시스템 자체의 건강성 회복 및 그 안에서의 존재적 본질에 충실할 때라고 믿는다. 그 안에서 의미 있는 학습이 되살아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역량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체계를 되살릴 수 있어야 하며, 그 안에서 공진화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교육생태의 원리를 중시하는 초심(初心)으로 돌아감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생태의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담고 있는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가 ‘학습사회(learning society)’이다.

학습사회란

- 1) 학습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삶의 과정 그 자체라는 생각,
- 2) 지속가능한 학습력 성장이 교육시스템의 핵심 가치라는 생각,
- 3) 학습권은 핵심인권이며, 연령과 계층, 성과 인종 차이 때문에 학습기회와 질에 대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
- 4) 학습을 보장받기 위한 다양한 교육경로와 방법, 기제가 복수로 작동하며, 쉽게 학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귀경로가 마련되어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생각,

5) 사회적 학습의 총량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사회가 가치로운 사회라는 생각

이제 학습사회는 교육생태의 새로운 차원을 설정한다. 학교를 넘어 학습사회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동안 학교에 대한 과편적이고, 외재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투기식 관리방식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생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적 관리방식이 어떤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교육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rumley, C. L. (Ed.). (1994). *Historical ecology*. Santa Fe, New Mexico: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 Davenport, T. H. (1997). *Information ecology: Mastering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environment*.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M. C. (2001). *The moment of complexity: emerging network cul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UNESCO. (2007).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08: Education for All by 2015 will we make i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윤영수, & 채승병. (2005).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제임스 무어. (1998). *경쟁의 종말: 기업생태계 시대의 리더십과 전략*. 서울: 자작나무.
- 한승희. (2001). *평생학습과 학습생태계*. 서울: 학지사.